

2025-07-11

율촌 입법 위클리

Yulchon Weekly Legislation Report

2025-10호 (2025년 7월 11일)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5년 6월 9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7월 3일 오랜 진통을 겪어 오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의무 선임비율 상향,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 룰),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지만, 조만간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곧 개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상자산 제도화 관련 신규 법률안이 급속도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비롯하여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고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안 또한 집중 발의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내용 구체화와 개별 통지 의무화,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신설, 정보보호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평가 의무화 등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다양한 규제 및 지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부가 AI 인재 육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공약한 만큼 대부분의 법안들은 AI 학습데이터 확보, AI 산업 인력 육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 등을 포함한 생태계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위클리 포커스 **바로가기**

- Focus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II. [국회] 입법 동향 **바로가기**

- ① 본회의 의결 법안 (7월 3일)
- ② 신규발의 법률안
 - 상법 후속 개정 관련 법안
 - 금융기관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
 - 가상자산 제도화 관련 법안
 -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보안 관련 법안
 - 인공지능 산업 지원 관련 법안
 -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련 법안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바로가기**

- [시행]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무회의 의결
- [입법예고]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안
- [행정예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 [동의의결] 엔터테인먼트 업계 '하도급계약서 발급' 관행 정착을 위한 동의의결안 확정

IV. 주요 입법 정책 자료 **바로가기**

- 정부/공공기관 정책자료
- 주요 세미나 / 공청회 / 간담회

Focus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랜 진통을 겪어 오던 상법 개정안이 극적인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25)의 개정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의무 선임비율 상향,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 룰),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입니다. 이 중 사외이사과 감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기존 개정안에는 없던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곧 개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상법 개정으로 각 기업들은 기존의 경영 방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제도에 맞춘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단순히 형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 인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기업 오너 및 대주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하던 관행에서 앞으로는 일반 주주에 미칠 영향을 포함하여 주주 친화적인 방식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항목	세부사항	시행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함	공포 즉시 시행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 기존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상향	공포 1년 후 시행
감사위원 선임시 3%룰 적용	'독립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의 경우에도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기존에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만 3%룰을 적용)	공포 1년 후 시행
전자주주총회 도입	-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 -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중 현장병행형 방식을 채택. 물리적 현장 총회와 전자 총회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함	2027년 1월 시행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상세설명 및 기업의 대응방안은 다음 리포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울촌] 상법 개정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2025-2호) [바로가기](#)

I. 위클리 포커스	II. [국회] 입법 동향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IV. 주요 입법 정책 자료
------------	----------------	------------------------	-----------------

① 본회의 의결 법안 (7월 3일)

법률안	주요 내용
본회의 의결 [221124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 -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한우농가는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본회의 의결 [221124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 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② 신규발의 법률안

상법 후속 개정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2210863 / 2025-06-16 / 정무위원회	-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이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 -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2211209 / 2025-07-02 /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대법원 판결인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 -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금융기관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보험업법 / 은행법 /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2210756, 2210758, 2210759, 2210765 / 2025-06-12 / 정무위원회	-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 - 타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상자산 제도화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2210734 / 2025-06-11 / 정무위원회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의원 등 37인) 2210736 / 2025-06-11 /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2210909 / 2025-06-17 / 정무위원회	-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연기금·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 -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2211117 / 2025-06-27 / 정무위원회	-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더라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 업무 위탁의 특례를 인정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보안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의원 등 12인) 2210762 / 2025-06-12 /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의원 등 12인) 2210763 / 2025-06-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률안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2210937 / 2025-06-1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기부 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부과 -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2210939 / 2025-06-1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2211130 / 2025-06-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이동통신사업자가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2211163 / 2025-06-30 / 기획재정위원회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 정보보호 전문인력 신규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2211167 / 2025-06-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수준 평가 의무화 - 정보보호 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

인공지능 산업 지원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2210781 / 2025-06-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특화되도록 보완하고, 반복 활용 및 대규모 가공이 전제된 학습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 2210903 / 2025-06-1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 이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법률안	주요 내용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최민희의원 등 13인) 2210957 / 2025-06-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원하기 위한 신규법률 제정 - 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시책 마련,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인공지능 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인공지능산업 지역인력 확보, 인공지능 청년인력 양성·활용, 인력 양성사업 추진 및 정보 협력, 우수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1인) 2210823 / 2025-06-13 /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및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경우 신고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등 10인) 2210832 / 2025-06-1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내용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2210881 / 2025-06-17 / 행정안전위원회	-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기구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 -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해당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으로서 '안전성평가'의 정의를 추가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신고하지 않고 이용을 하도록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2211088 / 2025-06-26 / 행정안전위원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 하는 책무를 신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2211142 / 2025-06-27 / 법제사법위원회	- 법 제정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I. 위클리 포커스	II. [국회] 입법 동향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IV. 주요 입법 정책 자료
------------	----------------	------------------------	-----------------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의결 및 예고

[시행]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무회의 의결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 2025-06-19

대상 법령	간호법 시행령 / 간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6-21
주요 내용	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 -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 이관 -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입법예고]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5-06-20

대상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예고 기간	2025-06-23 ~ 2025-08-04
주요 내용	- 본인전송요구권을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 본인전송요구의 대리 행사시 안전성·신뢰성 강화 규정 마련

[입법예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안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 2025-06-27

대상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예고 기간	2025-06-30 ~ 2025-08-11
주요 내용	-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 분류 허용 -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소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정상 분류 허용 -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반영

[행정예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5-06-19

대상 법령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예고 기간	2025-06-19 ~ 2025-07-09
주요 내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①거짓·과장, ②기만, ③부당 비교, ④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임 -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

[동의의결] 엔터테인먼트 업계 '하도급계약서 발급' 관행 정착을 위한 동의의결안 확정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5-06-24

대상 기업	5개 엔터테인먼트사(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주요 내용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사례 -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 -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①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②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③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④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 원(각 사 2억 원) 규모의 지원방안(안전장비, 촬영장비 지원 등)을 포함

정부/공공기관 정책 자료

31.8조 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2025-07-04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비 보조율 상향 및 지원 금액 인상(+1.9조 원)
-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426억 원)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 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 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및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확대(+2,907개소, +47억 원)

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2025-07-01

- 본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습니다.
- 주요 정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 원→1억 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1,80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2025-07-01

-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관 정책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5년 7월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 산업안전 측면에서는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의 작업 안전기준 강화, 구내운반차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의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등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주요 세미나 / 공청회 / 간담회

주제	주최	일시 및 장소
지속가능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전략 세미나	박충권 의원실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7.7. (월) 13:3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세미나	박성훈 의원실 한국무역협회 외	7.7. (월) 13:3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핵융합에너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제	황정아 의원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외	7.7. (월) 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김현정 의원실 외	7.8. (화) 10:00 국회의원회관 306호
디지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사회적 보호 실현 과제	이학영 의원실 외	7.8. (화) 15: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함께 만드는 녹색 도시,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을 위하여	서삼석·강득구 의원실 대한민국 ESG 정책 포럼	7.9. (수) 14:00 국회도서관 강당
ILO와 EU에서 본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쟁점과 과제	김형동·김주영 의원실 한국ILO협회 외	7.10. (목) 10: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	김성원 의원실	7.10. (목) 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방안	서영석·한지아 의원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7.10. (목) 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국제물류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한준호 의원실	7.17. (목) 13: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ESG 경영 대응 전략	권칠승·홍기원 의원실 경제포럼	7.17. (목) 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입법지원팀 ●

기업의 규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및 입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이러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



장재형 세무사



구기성 고문



김동석 수석 전문위원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



윤여훈 전문위원